

“방향은 정해졌고 구체화의 문제”

당정청, 비공개 회의... 정시확대 방안 내달 셋째주 발표

대학입시 제도 개편과 관련한 정부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가 이르면 다음주에 마무리된 뒤 11월 셋째주에 정시 비중 확대와 관련한 구체적 방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밝혔다. 조 의원은 당정청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학종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빠른 다음주 정도로 정리될 것 같다”며 “조사 결과와 종합적 검토를 거쳐 (정시확대와 관련한) 구체적 안은 11월 셋째주 정도에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 의원을 비롯한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종의 공정성과 신

뢰도를 높이기 위해 현재 서울대와 연세대·고려대 등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11월 첫째주에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학종 공정성 제고방안도 11월 중에 발표기로 한 바 있다.

조 의원은 정시확대와 관련해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냐”며 “어떻게 구체화할지의 문제인데 (교육 현장의) 의견도 들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첫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율을 ‘30% 이상’보다 ‘상향조정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지만 구체적인 비율과 시기에 대한 결정은 유보한 상태다. 다만 정시 확대에 부정적인 교육청과 대학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정시 확대 비율이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 소폭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당정청 회의에 참석한 한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정시확대 발언을 오버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체 대학의 정시 비중을 50%로 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며 “전체 대학에서 확 늘리는 논의 자체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가면 고등학교 교육이 엉망진창이 된다”며 “고등학교를 엉망진창으로 만들면서 대학교 정시 비중만 높여서 잡겠다고 박수칠 수는 없지 않냐. 오늘 회의에서도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은 “정시를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확대하면 부작용이 야기되니까 그렇게 양극화 현상 선별이나 고른 인제 선별을 확대하고 학교 교육이 불편해지는 것들, 이를테면 (학생들이) 잡지는 학교가 없게 만들기 위해 일반고 수준을 확실히 높여주는 대책을 만들자는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여야 4당 전·현 원내대표 “패스트트랙 법안 11월까지 처리해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선거법 개정안을 11월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전 원내대표, 유승민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정치 사법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관련법은 중단 없이 처리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5일 당시 각 당 원내대표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 검토 등의 선거제도 개편 관련 협의를 도출한 당사자들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재 여야는 관련법 협상을 위해 정치협상회의, 3+3 협의체 등 의미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진지한 협상을 통해 국

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를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12월 17일이 2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 임일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한달 전인 11월17일까지는 여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11월 내에는 법안처리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4당은 “무엇보다도 정치협상 과정이 패스트트랙을 지연하거나 봉쇄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 최초 관련법을 합의하고 패스트트랙을 처리했던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전 원내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결과적이지 않은 자세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제안

하고 추후했던 연대는 여전히 유효하고 관련법안은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여야 4당은 의원정수 확대론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홍 전 원내대표는 성명서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정수 확대는 당시에는 논의되지 않았고 여전히 패스트트랙 의결 당시에 합의했던 안이었다”며 “선거법을 기본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여기 있는 의원들의 뜻이 다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전 원내대표는 “4월 패스트트랙 때도 각 당 미세한 의견차가 있었지만 더 이상 법안이 표류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의견이 수렴했다”면서도 “다만 실제 본회의 처리시점에는 내용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뉴시스

이해찬, ‘조국 사태’ 사과... “여당 대표로서 국민께 송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검찰 개혁 상황과 관련해 당 소속 의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고

견을 하나하나 새겨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이 깊어지게 해버리지 못했다”며 “이 점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고

개를 숙였다. 그는 “많은 우려를 전해주시신 국민과 의원 여러분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유념하여 민생과 개혁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면서도 “다만 이번 일은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오만한 권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열망도 절절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총리 조화, 장관 조문도 사양... 절제된 文 대통령 모친상

차분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겠다는 원칙 고수... 정당 대표와 총리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받아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 마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의 빈소에는 30일 사회 각계의 애도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전날 발표한 대로 외부 인사의 조문과 조화를 사양하고 차분하게 ‘가족장’을 치르겠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고인의 빈소는 남천성당 내 추모관에 마련됐다. 성당 내 출입은 가족들과 신자들로 철저히 제한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 인사들의 조문과 조화는 대부분 반려되고 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낙연 총리, 국무위원 일동’이라는 문구가 적힌 조화를 보냈지만 반려됐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보낸 조화를 실은 트럭도 성당 앞에서 발길을 돌렸다.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낸 근조기도 반입되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빈소를 찾았다가 되돌아갔다. 김 의원의 경우 전날 저녁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성당에 왔지만 조문을 하지 못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경우 성당 안까지는 들어왔지만 조문은 하지 못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성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조문을 하러 왔다가 되돌아갔다.

문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들도 성당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참여정 부 때 문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날 빈소를 방문해 문 대통령을 잠시 만났지만 조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 마련된 모친 故 강한옥 여사의 빈소를 찾은 7대 중대 지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졌다. 얼마 전까지 문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행했던 조한기 전 1부속비서관도 빈소를 찾았으나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간혹 빈소를 찾아와 조문을 하고 싶다고 문의하는 일반 시민들도 있지만 대부분 문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 측에서 조의를 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그럴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문은 가족들에 한해서만 받고 있다. 5부 요인이나 외국 사절이 와도 정중하게 사양한다”는 방침이라며 “북한의 조화 등도 여기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종교계 대표들과 문 대통령과 가까운 종교인들의 경우 일부 조문이 허용됐다. 손삼석 천주교 부산교구장 등 7대 중대 대표들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빈소에 입장했다. 문 대통령

과 가까운 송기인 신부도 따로 조문을 하러 왔다.

정당 대표들과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문을 받기로 했다.

천주교 신자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께 부인과 함께 남천성당을 방문해 미사를 보고 빈소를 조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어머님의 신앙에 따라 천주교 의식으로 가족과 친지끼리 장례를 치르려고 한다”며 “많은 분들의 조의를 마음으로만 받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에서도 조문을 오지 마시고 평소와 다름없이 국정을 살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고인의 장례는 오늘까지 3일장으로 치러진다. 장례미사는 오늘 오전 10시30분 남천성당에서 열린다.

/뉴시스

靑 일자리수석 “비정규직 역대 최대? 상당한 과장... 중간 수준”

청와대는 30일 비정규직 노동자가 올해 8월 기준 750만명에 육박하면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통계청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역대 최대라고 하는 건 상당한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오전 ts 김여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올해 조사의 경우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고용지위와 관련된 부분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조사를 추가로 들어갔다. 예상치 못하게 추가적인 질문이 기존의 응답에 변화를 일으켜 추세와 다르게 상당히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이 같이 말했다.”

통계청이 전날 내놓은 ‘2019년 8월 근로 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

1000명이다. 지난해 8월 661만4000명보다 86만7000명 많은 수치다.

ILO는 임금·비임금근로자를 나누는 기준 지위 분류 체계에서 기간 기준을 강화해 임금 근로자를 세분화해 조사했고, 과거 조사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집계돼 과대 추정된 것처럼 보여졌다는 것이다.

황 수석은 “작년 조사에서 정규직으로 조사됐을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는 말이 맞았다”며 “지위가 가지고 있는 다른 통계들에 따르면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기간제가 오히려 줄어든 결과도 있고, 통상적인 추세와 달라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포착된 기간제 근로자 35~50만명을 제외하고서

라도 비정규직이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는 데 대해선 “36만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역대 최대라고 하는 건 당연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보다 높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다”며 “36만이 증가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이 조사를 하고 나서부터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황 수석은 “비정규직 자체가 논란이 많은 개념”이라며 “시간제 근로자 전체를 비정규직으로 보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다. 그래서 2018년 8월에 일자리위원회에서 노사정이 비정규직 개념을 다시 정의해보자고 합의했다”고 했다. 이어 “노사가 이견이 크지만, 비정규직 범위와 규모를 측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첨단 농업의 장, 농업의 미래를 열다!

김제농업기계박람회

2019. 11. 5(화) ~ 8(금) 벽골제

관람시간 : 09:30 ~ 17:00 관람료 : 무료 www.gjame.co.kr

전시분야 4차산업 및 스마트 팜 농기자재 전시 (수도작, 밭농업, 재배, 축산, 수확 및 가공, 시설 농업 등)

부대행사 농업기계연세, 농업기계 학술심포지엄, 수출활성화 방안을 위한 세미나, 김제시 홍보관(귀농귀촌, 관광, 우수농특산물), 참관객 경품행사 등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기계학회,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문의 : 김제시 농업정책과 (063.540-3644)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수출전시팀 (041.411-2133~4)

주최 전라북도 김제시 주관 AMICO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